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7
----------	------

발의연월일 : 2024. 7. 29.

발 의 자 : 서천호 · 김예지 · 김선교
우재준 · 안철수 · 조경태
최형두 · 백종현 · 김장겸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이들에 대한 친권의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만이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검사는”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 (이하 “검사등”이라고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가”를 “검사등이”로, “검사에게”를 “검사등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는”을 “검사등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u>검사</u> 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 ----- ----- <u>검사</u> ,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 <u>검사등</u> ”이라고 한다)은-----.
② <u>검사가</u>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u>검사에게</u>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	② <u>검사등이</u> ----- ----- ----- ----- ----- ----- ----- ----- ----- ----- <u>검사등에게</u> ----- -----.

<p>구를 요청받은 <u>검사는</u>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u>검사등은</u>-----</p> <p>-----</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	---